

2030 인천미래교육 2차 포럼

-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미래진로교육

■ 일시 ■ 2020. 9. 2.(수) 16:00~18:00
■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차 례

[발제1] 인천 미래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천 진로교육

- 이덕한 중등교육과 장학관

[토론1] 인천형 미래 진로 교육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 이준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위원

[토론2] 인천 진로교육의 도약을 기대하며

- 박종학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위원

[토론3] 청소년의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위해 ‘나들’이 할 일

- 마재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위원

인천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전 세계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COVID-19 전염병 사태는 단순한 보건안전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에서의 강력한 이동 제한 및 격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파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수천만 명의 감염자와 백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낳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불행 중 다행으로, 선진적인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접근법과 시민의 공공적 협력 및 참여 방식이 이웃 나라들의 방역체계와 대비되면서 한국형 방역모델이라 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난 4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전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을 학교와 대학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우리나라의 모든 교수자와 학생들이 일거에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 개학 첫날,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이“미래교육을 앞당기는 교육혁신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수업의 경험을 통해, 과연 ‘한국형 방역모델’과 같은 새로운 ‘한국형’ 교육혁신 모델이 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한국형 방역모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 학습과 산업계의 기술 축적, 각종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 시민사회의 성숙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국형 교육혁신 모델이 가능해지려면 역시 우리 교육계의 축적된 기본 저력을 토대로,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교육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안은 한 문제라도 덜 틀리고 일 분이라도 더 빨리 시험문제를 푸는 능력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방식이 우리 교육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COVID-19 대응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도 있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행동력도 갖추고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높은 교육열에 더하여, 전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단기간 적응하고 있는 순발력 있는 탄력적 대응을 놀라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지식의 양을 제대로 전달했는지가 초점이 되는 ‘진도 빼기’와 같은 용어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 온라인 수업과 같은 기술적 변화가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힘들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식의 ‘4당 5락’과 같은 프레임이 학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노출되고 있는 한,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반복·선행학습 책임지도’라는 학원의 흔한 광고 구호는 우리 공교육이 얼마나 양적 투입 위주의 ‘열공’ 프레임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되짚게 한다.

우리의 선진적인 기술과 결합한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원활화하고 개인맞춤형 지도를 심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양적 투입과 열공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반복·선행학습의 틀을 온존하는 한, 교육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교과서 위주의 지식 전달식 교육으로부터 경험과 참여 중심의 ‘해 보는 교육’ 혹은 ‘겪어 보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패러다임에서 상황과 맥락 중심의 동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가상공간을 포함한 마을과 지역 나아가 지구촌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모델이 요구되는 것이다.

10여년의 학교 진로교육의 역사는 결코 길다고도 혹은 짧다고만도 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진로교육이 추구하고 지향해 온 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2. 교육현장의 현실과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교육이 학교라는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장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는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근저에 흐르는 일관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에는 입시 위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 밖 인적, 물적 자원의 참여를 결합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 사례로 노무현정부의 방과후 정책, 이명박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혁신교육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학교 교과를 마친 이후인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면, 이명박정부는 학생들의 나눔과 봉사, 진로탐색 활동 등의 참여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 교과 시간의 일부를 할애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정비하였다. 방과후 학교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인력이 ‘강사’의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교육 요소가 지역사회로부터 보충되었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선 교사가 직접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 상황을 반영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완성하도록 한 정책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중학교의 여섯 학기 중 한두 학기를 전적으로 학생들의 ‘토론·실습 및 참여’를 통한 교육활동에 할애한 정책이 자유학기제 사업이다.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는 자유학기 기간의 전 교과 과정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학기 중 170시간의 자유학기 활동시간은 특별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체

능 활동 및 진로체험 활동 등으로 운영하도록 되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학생들의 교과·비교과 및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과 생활이 주입식 암기교육 위주의 기존 교과목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전인적 발달과 민주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정책¹⁾을 추구하고 있다. 혁신교육 정책은 특히 교육의 일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및 학교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²⁾.

사실,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학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의 범위를 학교와 교실의 물리적 영역 안으로만 가두어 접근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비단 학교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때문이다. 특히 지식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지능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청소년 교육에서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미 2001년에 이루어진 OECD(2001)의 미래학교에 관한 6가지 시나리오 예측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갈수록 상대화되는 학교교육의 비중과 더불어 학교 밖 교육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를 다룬 바 있다.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노동시장에서의 대응이 가능하였던 시기의 학교교육은 기(既) 확립된 지식과 정보를 분류하여 전수하는 기능만으로도 나름의 절대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기술의 순환주기가 단축되면서 학교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비중은 새로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 및 학습을 통한 재교육이 일상화되고, 기존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넘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한 다양한 선택과 창의적 대응이 요구되는 평생학습의 사회가 가시화되면서, 청소년기의 교육조차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확장된 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정신이라 할 것이다.

기존 지식의 전승보다는 바다와 같이 넓게 산재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지식생태계의 변화 앞에서, 청소년들이 넓은 세상을 직접 만나 다양한 경험과 살아 있는 지식을 만나고 소통을 배울 기회는 갈수록 절실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다 확장된 교육의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 활동은 적지 않은 내외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교실과 학교 안 수업활동 중심의 과정에 익숙해 있는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실천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특히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기획 및 편성, 수업활동의 수행 등만 하더라도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resources) 확보와 연계 등의 일감은 교사에게는 새로운 업무의 부과와 다름없게 다가온다. 비록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고유의 임무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가교육과정³⁾’ 운영이

1) 혁신교육정책은 2009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혁신학교’의 운영에서 시작한 것으로, 현재 서울,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교육부에서도 혁신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정책의 일반화를 모색하고 있음.

2) 혁신교육정책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단순히 혁신학교의 확대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을주민까지 교육의 공동주체로 포용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강민정 외, 2018).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IV.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해 교육청 수준(38쪽)에서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를 제시하고 있음.

제시되고 있고 또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 관점에서 실천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돈민(2013)은 학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① 지역사회를 넓은 의미의 교육활동의 장소로서 인식하고 활용하는 인식의 문제: 학교에 팽배해 있는 교내 중심의 교육활동 실시 풍토 ②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학습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부족 ③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을 협력하여 운영해 줄 수 있는 체계적 인력확보의 문제: 교육활동 지원인력 활용의 어려움 ④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수행할 학교 내 구조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 담당 및 체계의 부재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3. 교육생태계 논의와 학교-지역사회 연계 사업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진로교육 정책과 이들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정책 추진과정의 이슈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 틀로서 ‘교육생태계(educational ecosystem)’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 및 이와 연관되어 있는 현장의 지향성, 그리고 관계망 형성 정도나 주체들의 움직임, 그 결과물의 효과성 등을 교육생태계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나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유용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정책 관련 이슈나 관계망을 자연 생태계의 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원용한다기보다는, 교육현장의 복잡다기한 여러 관계와 문제들을 ‘생태계(ecosystem)’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 문제와 이슈를 보다 단순화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Mueller & Toutain, 2015).

“생태계”라는 개념은 영국의 식물학자 탠슬리(A. G. Tansley)에 의하여 1935년 처음 도입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Mueller & Toutain, 2015; 류준호·윤순금, 2010). 탠슬리는 자연을 구성하는 유기체인 생물과 생물이 이루고 있는 군집, 그리고 무기적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생태계”(ecosystem)라고 명명하였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체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유기체가 속한 군집 및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고 또 긴밀하게 얽히면서 함께 적응하고 진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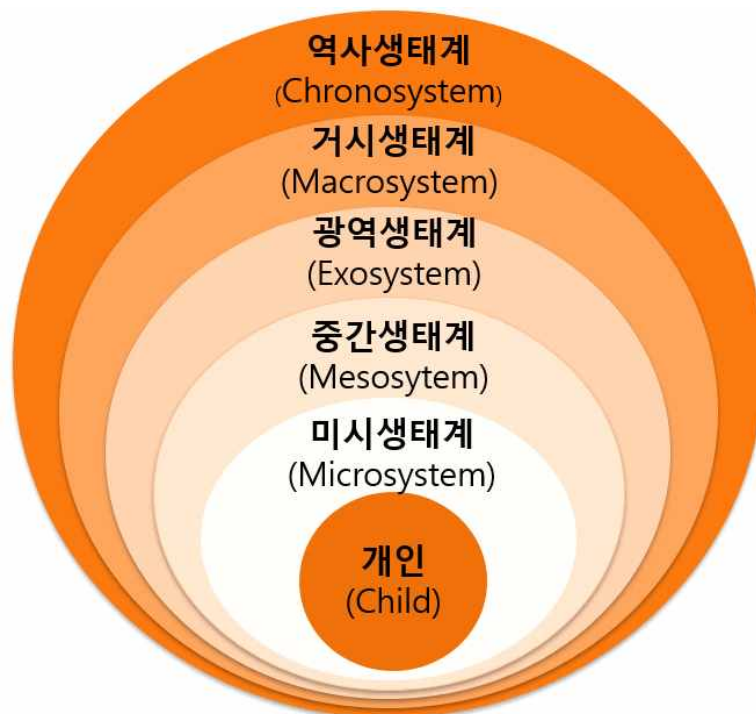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6; 1993)는 이러한 “자연생태계”(biological ecosystem)의 개념을 인문·사회과학에 적극 도입한 이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일련의 저작을 통해 사람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자연에서의 생태계가 연못과 같은 작은 생태계로부터 이들 작은 생태계를 포괄하면서도 더 크고 넓은 생태계로 확장하는 다층구조를 이루듯이, 인간발달에 있어서도 한 개인은 작은 생태계와 그 생태계를 내포하는 더 큰 생태계의 중층적 구조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발달 생태계 모델의 특징을 다음의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로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 명제: 유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개인은 그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개인, 조직, 사물, 상징물 등 ‘직접적인(immediate)’ 환경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관계로 인해 일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명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직접적 환경에 더하여 사회적 맥락(context)에 따른 간접적 관계(형식이나 내용물, 권력관계 등)가 가세하면서 직간접의 환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Bronfenbrenner, 1993).

그는 이러한 명제에 따라 인간발달의 생태계 모델을 마치 뚜껑을 열면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타나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와 같은 방식의 다섯 가지 층위 구조로 구성된 집합적 층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계 모형



출처: Bronfenbrenner(1993)

가. 미시생태계(microsystem): 아이가 살고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직접적 관계가 발생하는 생태계로서, 부모와 형제로 이루어진 가족, 주변 이웃의 또래 그룹, 학교의 교직원과 친구들 등 아이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관계를 맺는 생태계이다. 이들 미시생태계 내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아이의 심리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중간생태계(mesosystem): 서로 다른 미시생태계들 간의 관계망으로 구성된 생태계로서, 이들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생태계는 아이(개인)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족과 학교, 혹은 학교와 또래집단 등 이들 미시생태계 간의 관계와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 중간생태계는 미시생태계의 직접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발생시키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아이의 특정한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아이와 친구 간의 직접적 관계로 발생하는 미시생태계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망을 맺게 한다.

다. 외부생태계(exosystem): 복수의 미시 혹은 중간생태계가 모여 집합적으로 구성하는 생태계로서, 예컨대, 아이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승진에 집착하여 과도하게 직장일에 몰두함으로써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처럼,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망을 포함하게 된다. 먼 친척이나 부모의 직장 동료, 담임 교사의 자녀 등 아이가 직접 접촉한 적은 없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관계를 말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시설, 이웃이나 특정 관습 등도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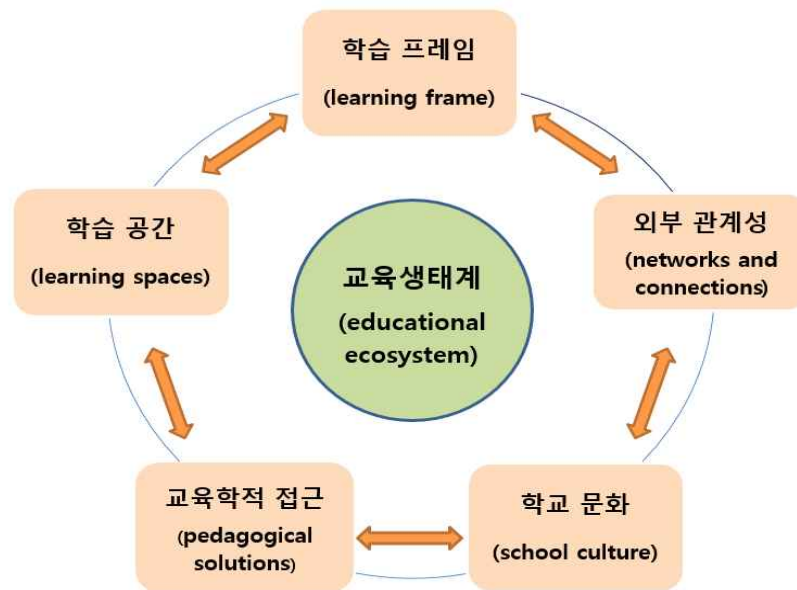
라. 거시생태계(macrosystem): 아이가 직접 접촉하거나 직간접의 상호관계 형성이 어려운 상위생태계로서, 예컨대, 그 사회의 문화적 패턴, 정치적 경제적 체계와 가치, 특정 신념이나 지식체계, 대중매체, 국가 정책 등의 방식으로 하위생태계(미시, 중간, 외부생태계)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아우르는 생태계이다. 예컨대,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와 개발도상국에 태어난 아이의 성장과정이 동일하기는 어렵다.

마. 역사생태계(chronosystem):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요소를 포함한 생태계로서, 아이로서는 환경이 변화하거나 지속됨으로써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가족구조의 변화나 주거지 이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등과 사계절의 변화나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등을 통해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범위를 말한다.

한편, 브론펜브레너가 개인의 발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생태계 이론을 전개하였다면, 물러 외(2015)는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을 매개로 한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교육생태계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때 학교 단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의 다섯 차원(dimension)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 학습 프레임(learning frame): 교사와 학생은 외부협력자(partners)와 함께 협력하여 실천하려는 학습목표나 동기가 뚜렷한가?
- 네트워크와 관계성(networks and connections): 마을과 지역, 전국 나아가 국제적 차원까지 확장하여 외부 자원과 폭넓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가?
- 학습 공간(learning spaces): 학교 안팎의 유효한 학습 공간에 대해 학생이 주도적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학교 문화(school culture): 학교 구성원과 외부 협력자가 공통의 학습방향을 공감할 수 있는 동질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 교육학적 접근(pedagogical solutions): 학교구성원과 외부협력자를 연결하는 체험학습이론 및 가치, 활동체계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림 5] 물러 외(2015)의 교육생태계 모형(재구성)



출처: Mueller, S., & Toutain, O.(2015). 20쪽의 내용을 재구성함.

물러 외(2015)는 이 다섯 차원에 더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즉 학습자, 교사 및 외부 협력자의 학습(교육) 참여 동기와 자율적 실행력이 건강한 생태계 유지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체의 자율적 학습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의 과정이 탑다운(top-down)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및 관련 사업과 이를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은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의 보다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교육생태계 이론의 출발선이라고 해도 좋을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이나 학교로부터 교육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는 물러 등의 논의는 현재 우리에게 관심이 큰 마을교육공동체 및 진로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브론펜브레너(1993)가 지적하였듯이, 한 아이의 발달을 위한 교육생태계는 가정과 학교와 같은 특정 공간의 분리된 관계의 총합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가정과 학교 간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발생하는 관계망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생태계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태계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육체계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로 전이 혹은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생태계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 학습자로서 ‘개인’이 생태계 모델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 개인은 본인의 성향이나 유전적 혹은 기질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나름의 자기 체계(self-system)를 가진 존재이다. 자연생태계에서 보자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제가 내재되어 있는 생산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다⁴⁾. 학교-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가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

4) 자연생태계에서 식물은 충분한 햇빛과 산소, 물만 있으면 광합성에 의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자임.

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과 물리적 환경은 학습자 주도성을 고양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든 교육과 교육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특성상 하나의 생태계가 하위의 여러 생태계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더 큰 상위의 생태계에 포섭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태계 군집 간에는 우열적 관계가 발생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학교와 지역사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섭하거나 부속화하는 방식보다는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와 협력을 맺을 때, 개인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역동적이고 활발한 생태계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기체와 군집, 무기물 등 요소들이 나름의 자리에서 스스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생태계에는 학습자인 학생 외에도 학교 안팎에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계자⁵⁾, 자연생태계의 무기질에 해당할 학교 안팎의 시설과 공간, 재정 그리고 체험 및 학습의 재료들이 존재한다. 이들 요소가 교육생태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 기능을 수행할 때 교육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은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및 관련 사업을 통한 확장된 교육생태계를 위한 정책 방향은 이들 학교 안팎의 관계자 및 교육지원 요소에 얼마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4. 교육생태계의 확장과 진로교육의 역할

확장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요와 지역사회의 수요가 만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수요만으로는 관계가 맺어지더라도 시혜적 혹은 타성적 관계가 되기에 십상이고, 이는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헤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수요 측면으로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학교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 및 산업체의 시설과 공간, 문화·복지·관광 기관 및 시설, 소상공인의 자영업 공간 등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인 학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이미 목격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지방조직, 공기업 및 유관기관 등 많은 조직이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 인력이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습자원과 프로그램은 개별 기관이나 단체, 시설별로 학교와 연계·협력 관계를 취하기도

5) 학교 안의 교사와 관리자, 행정 직원, 시간 강사 등과 학교 밖의 학부모, 직업인, 기업·시설·기관 종사자들, 마을주민 등 관계자 등

하고, 지역사회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이들 자원과 프로그램들은 학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기도 한다⁶⁾.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 측면도 결코 작지 않다. 학교교육은 단순히 행정체계상의 구획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지역 구성원의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의 선택에 있어서 학교의 질 문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거 8학군은 강남 지역이 ‘강남’이 되도록 하는 유력한 유인 요소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귀농 지역을 결정하는 유력한 요인도 역시 자녀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의 질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학교문제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 전략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교육문제를 결코 등한히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교가 보유하는 교원 등 전문인력은 지역문화의 창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수한 인재와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에 있어서도 학교 자원의 유입 여부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나 교육 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자원은 관련 지역경제 혹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그 파생 효과가 작지 않다.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동네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학교 주변으로 형성되는 상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드라지게 된다.

한편, 진로교육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일생 동안 수행하게 될 일과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진로교육을 통한 청소년기의 다양한 학습 및 여가, 일 경험은 청소년들이 일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국가적으로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진로교육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진로교육이 청소년 개인으로는 적성 및 개성의 개발,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을 통한 자아실현의 성취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균형적인 공급을 촉진할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김승보 외, 2014a).

청소년을 시험성적이나 점수가 아닌 적성과 개성의 발굴, 잠재된 소질과 능력의 개발이라는 개인적 삶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진로교육의 특성은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여지가 있다.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경도되어 오직 ‘점수’로만 개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교육풍토에서, 개인이 취득한 점수가 아닌 학생 개인의 삶의 방향과 관련한 접근을 요구하는 진로교육은 현행 학교교육에 새로운 경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로교육은 한 개인의 인간 발달 혹은 성장을 위한 ‘교육생태계’의 확장 관점에도 보다 새롭고 유익한 시각을 제시해준다. Gysbers & Moore(1981)나 Hall, D. T.(1996)이 주장하듯이, 진로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사건 경험과 주변 환경의 통합(integration), 그리

6)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교육활동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각종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 예산과 결합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김승보 외, 2014a).

7)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고 일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전경험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생애 진로개발(lifelong career development)뿐 아니라 삶의 폭(lifewide)과 깊이(lifedeepest)의 차원으로 진로개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김승보 외, 2014b).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방식이 지나치게 지식 전달에 집중하고 있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실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에 치중하고 있음을 더욱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체계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나 교육활동 이해당사자의 교육적 연계 부문을 극히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 엄존한다는 교육계의 일반적 인 지적(신현석, 2006)은 진로교육이 그동안 추구해 온 ‘확장된 교육생태계’의 관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학기제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등에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확장된 교육생태계로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의 최전선에 진로교육이 서 있는 것이다.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을 통한 확장된 교육생태계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진로교육의 특성은 진로교육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2조는 진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략)...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범주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수업이나 학교의 진로심리검사 혹은 상담 정도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넓은 교육활동의 범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 제공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진로교육 제공의 수단으로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아우르는 진로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교육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지향성이 진로교육 안에는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한편, 학교의 교육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한 점은 확장된 교육생태계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진로교육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실체라 할 수 있다.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활동이 미진하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더욱 확장된 학교교육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20년 4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26개로서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단위에 98%가 넘는다.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진로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진로체험이라는 협소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승보 외(2016)는 진로체험 활동(experiential learning for career development)을 단순한 노작 활동(hands-on activities)의 수준을 넘어서는 존 듀이의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혹은 Kolb(1979)의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상황과 맥락 중심의 동태적 진로개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진로교육의 프레임과도 정확히 닿아 있다 할 것이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에 정부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의 시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질을 극복하고자 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는 교육을 위하여, 교과서 위주의 지식전달식 교육으로부터 학교의 교육영역 확장과 교과 운영방식의 전환을 지향한다. 학생들이 직접 ‘해

보는 교육' 혹은 '겪어 보는 교육'을 추구한 정책으로서 자유학기제는 학교 안팎의 교육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을 극복하고 '토론·실습·참여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 자유학기제의 근저에도 학교-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한 확장된 교육생태계를 지향하는 진로교육의 특성이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170시간의 시수로 할애되는 자유학기 활동에 주로 연계된 이들 진로체험활동이 과연 진로교육의 효과성 차원에서는 얼마만큼의 성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교두보로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기여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다른 어떤 정책 영역보다도 앞장서서 교육생태계 확장에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5. 인천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은 학교의 일반 교과목과는 다르게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어·영어나 음악·체육 등 일반적인 교과목과는 달리, 개별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은 객관적인 점수⁸⁾를 통해 학생을 평가하기보다는 개인맞춤형이나 참여형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진로 고민과 탐색 과정에 관련 교사와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한 원리로서도 의의를 가지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은 개별 교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정 영역으로 머물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방향성으로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은 일반 교과·비교과 활동과의 연계나 범교과, 교과 통합적 운영, 그리고 진로교사만이 아닌 학교관리자 및 모든 교원이 진로지도의 철학 및 관련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진로교육은 그동안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운영한 측면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가 그러하고 현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SW교육 등과의 연계·협력도 진로교육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인천지역의 진로교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씨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교육의 기반이 되는 확장된 학습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4~5년간 진로체험과 자유학년제의 실시, 학교-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양하고 많은 양의 진로체험 활동에 노출되고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경험하고 있

8) 진로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아직 점수화가 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진로교과에는 점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그러나 이들 학습생태계 확장 사업이 중장기적 존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실천학습이 가져올 효과성과 차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이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교실수업의 지식 전달이나 피동적인 수업활동 방식을 답습하거나 단순한 일회성 경험의 반복으로 점철되기가 쉽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진로체험이 일회성 단기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진로체험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도는 단지 일회성 단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단기프로그램이고 일회성이어도 프로그램의 학습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한다면 나름의 학습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활동 멘토의 스토리텔링이나 발문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강의료가 비싼 유능한 강사 섭외에 학습성도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미래역량 형성이 ‘4차 산업혁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업인이나 강사의 강의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수동적인 체험활동이나 강의 혹은 과거 고정관념의 연장선에 있는 산업 및 직업 유형 프레임으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에게 미래세계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은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연구 투자와 환경 조성은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 학교 단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충분히 검토·평가하고 기획하여, 이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시도하는 선순환의 과정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에서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세상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이해, 자기주도성이나 진로성숙 등 학습효과가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신뢰를 학교, 학부모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에게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장된 학습생태계 구축에 수반되는 각종 애로점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은 학교 울타리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간과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확장된 학습생태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비록 적지 않은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남아있고, 또 적지 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확장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은 국가적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학교 안팎에 걸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학습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업 및 정책 과정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이 어떻게 연계·협력할 것인지,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이해와 관심도 조금씩 높아졌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보다 배가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는 미추홀구에만 존재하는 진로 관련 조례를 확장하는 등 인천 지역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진로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계 내부의 공감대 확장 및 지역상공인과 주민,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 심화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청소년들의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자치체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지자체 의회 및 산하기관·조직 구성원까지 확장하여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 배정 및 인센티브 정책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관련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조사·정리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진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를 격려·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나 진로교육 사업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교교육에서 적극 수렴하고 활용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지역별로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허브로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청소년의 학습활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기구이다. 비록 설립 목적이 진로체험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을 ‘진로’ 사업으로 국한하여서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실천학습이나 경험학습과 같은 상황과 맥락 중심의 동태적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지역사회 자원 접근 및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 이해에 있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유용성은 지역사회의 여타 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설립 초기부터 의사결정 구조 및 운영체계를 중앙 단위에서 일률적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지역별 자원 분포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합의와 협력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를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의 학습자원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구축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은 비단 진로교육이나 자유학기(년)제 사업뿐 아니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독특한 가버넌스 덕택이다. 현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이나 창업체험교육, SW교육 정책 등에도 그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 일이다. 전근과 졸업 등으로 구성원이 끊임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학교구조와는 달리, 지역사회에 불박여 있는 지역 인프라와 정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전반적 추진 주체들이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에 따라 새롭게 조직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재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체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자리매김하면 되는 것이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단순한 사업의 일환이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강민정 외(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맘에드림.
- 교육부(2015). “기초 자치제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에 적극 나서 - 교육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보도자료 2015.6.4.).
- 김승보 외(2014a).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외(2014b). 「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외(2016).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김현정(2019).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 류준호·윤승금(2010).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구성 및 구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4), 327-339.
- 윤형한, 김승보, 정지은(2018),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활성화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돈민(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269-291.
- 한국직업능력개발(2018). 2018년 꿈길 진로체험 인프라 현황(‘18.2.22 기준)
- Bronfenbrenner, U. (1976). The Experimental ecology of Education. Teach. Coll. Rec. 78(2): 157-204
- Bronfenbrenner, U. (1993).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Elsevier
- Gysbers, N. C., & Moore, E. J. (1981). Improving guidance progra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ll, D. T. (1996). Protean careers of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0(4), 8-16.
- Mueller, S., & Toutain, O. (2015). The Outward Looking School and its Ecosystem. Stockholm: OECD, European Commission.
- OECD(2001). Scenarios for the Future of Schooling. Published in What Schools for the Future?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인천 진로교육

●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덕한

I. 들어가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든 가운데 코로나19는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과 활동이 시도되면서 교실 수업과 직접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교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회의 변화에 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진로 교육도 과거의 직업 매칭 교육에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9년 국가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진로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높은편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는 전국 4위, 고등학교는 전국 1위로 나타났고,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는 전국 8위, 고등학교는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진로 개발역량 수준은 전국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인천 진로 교육을 진단할 때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미흡하며, 교실 안에서의 지식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중요한 국면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인천 진로 교육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II. 인천 미래 진로 교육의 방향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 핵심역량을 토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철학 및 비전을 반영한 인천의 미래 진로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생의 진로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매칭하는 교육에서 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금은 진로 ‘매칭’의 시대를 지나고 진로 ‘적응’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성숙도보다는 진로적응성, 진로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 재구성 자료를 개발하여 진로 교육이 진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이나 교과통합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출발선부터 균등한 진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개인별 진로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행복재단 국가발전 정책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자녀는 진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또한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진로 교육을 계획하여 진로 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필요한 삶의 힘을 키우는 맞춤형진로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학교는 초·중·고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시스템의 부재에 따라 개별 교사별로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별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 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정보와 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진로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고·판단 중심의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경험을 축적하고 교사들은 디지털로 기록되어 보관된 학생들의 진로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 활동 평가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학교·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활동은 학생별 적성과 흥미가 고려되기 어려웠으나, 진로교육플랫폼을 활용하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고 학생들의 참여 지속시간을 고려한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진로 교육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지자체 산하에서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공공기관, 진로체험 인증기관 등 초·중·고등학교 안팎에 흩어져 있는 진로교육 자원과 인프라를 통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대학·산업체·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인천형 맞춤형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협력과 공존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Ⅲ. 인천 미래 진로 교육 추진 계획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진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급별 인천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한다.

교과통합 진로 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운영 가능한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진로인식을 위한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과정을, 중학교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년제 운영 교육과정을, 고등학교는 진로설계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인천 관내 학생들의 지역간, 학교간, 개인간 진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 교육 직속기관을 설립하여 인천 8대 전략산업 및 지역적 특색과 경제적 인프라를 반영한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과정 및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초·중·고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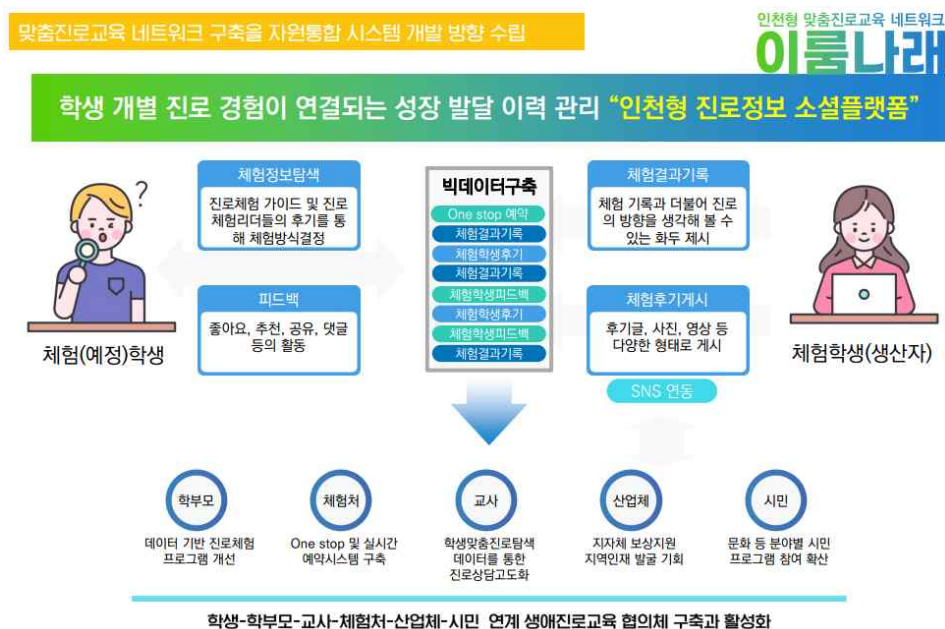
AI커리어존(진로 적성/심리 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초·중·고 연계 종합적 진로 이

력 관리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진로체험 및 진로 교육 활동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생 진로에 맞는 체험처 탐색, 신청, 기록, 상담을 통합 지원한다.

그리고 성장단계별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 교육청 제작 동영상 자료, 진로 교육 관련 기관 교육 자료 등 진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넷째, 사이버 인천진로교육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진로 교육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진로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원스톱 예약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별 진로 경험이 연결되는 성장 발달 이력 관리를 구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실감 콘텐츠를 도입하여 미래 가상의 직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협력적으로 수행하여 4차 산업혁명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삶의 힘을 키운다.



다섯째, 인천의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특색 및 인천광역시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 분석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 교육 공간을 확장한다.

교육청-학교-지역사회-진로 교육 관련 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한 진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마을과 연계한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 체험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Ⅳ. 나가며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직업에 따라 사회경제적 차별이 심한 경우에는 진로적성과 관계없이 특정 직업으로 선호도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직업에 따라 급여 등의 차별이 심하다면 진로 교육의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사회는 교육의 결과가 개인의 직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은 본 모습을 잃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인천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삶에 필요한 역량이 자라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바람직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선택한 진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형 진로 교육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인천형 미래 진로 교육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 이준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I. 들어가며

저는 3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진로 교육을 받던 학생 때의 경험입니다. 일반계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진학이라는 목표에 발맞추어 다녔습니다. 진로의 의미를 진학으로 치부하여 진로에 대한 고찰과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대학 진학 후에 과거 진로 교육에 대한 경험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공대는 취업이 잘 돼서 걱정이 없어’라는 말만을 듣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진학하였습니다. 자기의 이해와 사회와 직업의 이해하는 정보와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과 진로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정책참여에 대한 경험입니다. 앞선 경험을 가지고 교육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제고 방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1. 현 진로교육 진단과 제고요인 파악 필요성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진로 교육의 목표를 ‘성장단계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진로 교육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나는 진로 중심의 학생 성장형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의 진로역량 개발 함양과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이것이 설정되는 배경은 진로 교육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진로 교육법이 개정된 이유와 함께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 마련’이라는 개정이유입니다. 이 이유처럼 미래진로 교육을 위해서 현재 상황 진단함과 동시에 제고 요인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현 진로교육의 상황에 대한 생각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나라의 사회복지분야의 영향을 준 표현입니다. 이에 연장하여 인천시교육청 미래진로교육 추진계획에서는 대상별 진로교육의 기준을 학급별 즉 학생의 발달 단계로서 설명이 같은 맥락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진로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개발과 더불어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과 상담의 요구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교사나 교육 당국자들이 학업 지도에 비해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학교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나마 정규 인문계 고교에는 대규모 단위로 제한적으로 진학 상담을 실시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실업계 학생, 대학생들에는 포괄적 상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로 교육에 있어 내적 성격이나 적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 위주, 입시 위주, 진학 문제 위주로 다루게 되고 단기적 안목으로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직업이나 전공에 대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하여 다른 전공,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방황을 거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셋째, 학교에서는 체계적 진로 상담 시스템의 부재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지만 결과에 따른 개별 심층상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지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진로 결정이나 미래 직업 계획을 세우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진로 상담의 모형 개발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진로교육은 국내 외의 사회와 상황을 관찰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 등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진로 상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열 선택을 위한 도구 정도에 그치고 전공이나 커리어 선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직업의식, 문화, 국내외 정세와 사회 트렌드, 미래 전망에 따른 독특한 상담 모형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로교육을 움직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예산 그리고 선례입니다. 위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진로 교육 활성화 있어 원활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로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로 교육 관련 법이 1건이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에는 직업교육으로서 그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진로 교육 관련 입법 연구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을 움직이기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론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료를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진로 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과 도움 정도 그리고 향후 참여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인천 청년들이 고등학교 재학하였을 때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① 교육부 진로교육현황조사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통계자료에서 학교 현장 진로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들의 향후 진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조사한 통계자료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확인할 경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요소가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 역량 제고’라고 응답하였습니다.

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과 도움 정도」경인지역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현재에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진로와 직업취업 상담 경험 여부는 ‘예’ 59.8% ‘아니요’ 40.2%, 진로와 직업관련 체험 경험 여부는 ‘예’ 29% ‘아니요’ 71%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진로 시스템의 부재와 모델이 부족한 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③ 통계청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인천지역 시민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하는 편은 ‘34.9%’이며 그 외의 편은 ‘66.1%’을 나타낸다. 이는 자신의 성향 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고찰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로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진로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2. 인천미래 진로교육 정책목표와 수단

- 학생 진로 포트폴리오

학생의 진로 상담을 위해서 성향,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진로 적성검사, 직업 검사 등과 같은 자료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축적되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되돌아보거나 내다보는 자료로써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학교와 지역교육청 중심 거버넌스 구성

진로교육지원은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을 발굴, 제공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 기능 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삶의 힘’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 목표처럼 유효한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변화하듯이 해당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위학교 더 나아가 마을이 학교와 지원교육청 중심으로 진로 교육 관련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 진로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방법 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 교육 지원 조례’ 제 4조에 보면 진로 교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 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기존 진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자료에 대한 평가와 민관이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평가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목표 수립에 있어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진로 상담의 부재, 진로 활동 시간에 자습하기 등으로 더 이상 학생의 진로 교육 시간을 허비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의 소주제를 ‘인천 미래 진로 교육의 날’로 정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하루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는 요즘 오늘 토론 이후에 일력 지가 뜰어지게 되어 인천 미래진로 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Ⅲ. 나가며

사실 ‘진로 교육’이라는 용어는 듣기 어렵지 않은 익숙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참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의 인식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 교육에 대한 의미를 여쭙어볼 경우 대체로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답변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진로는 직업 선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고등기관 진학 후 안정된 취직과 생활 보장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의 진로 교육은 기존의 직업 분야를 소개하고, 학생에 적성에 따라 선택토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과거와 다른 낮은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기성세대의 사고로 발맞추어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과거에 직업 세계가 빠르게 달라질 것이며 사회 구조와 환경 그리고 개인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교육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로 교육은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는 이분법적 시점에서만 국한하면 안 되며 ‘평생의 삶’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진학과 전공 선택 그리고 취업에만 국한된다면 아이들의 인생 단위의 진로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1. 교육부 진로교육현황조사
2.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추진 계획 2015~2020
3. 인천광역시조례 제5694호, 2016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4.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 (II)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5.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질문

김승보 위원님과 이덕한 장학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이 양적지표로서가 평가되어온 것 같습니다. 향후 미래 진로교육을 ‘삶의 힘’이라는 목표와 연계하여 질적지표로서 어떤 평가 기준이 구상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진로교육의 도약을 기대하며

● 박종학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COVID-19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관성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교육적 관행에 대하여 다시금 정리하고 자리매김 해야 하는 시점에 소통분과에서 진행하게 된 미래 진로 교육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한 방안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 코로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주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 했었지만 COVID-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야간 자율 학습을 비롯한 관행들이 뒷편으로 사라지고 온라인학습은 어느새 우리곁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지금도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과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백가쟁명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하는 뚜렷한 해결책은 마땅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요구와 경험, 문제해결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성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 진로 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1. 인천 진로 교육의 방향

발제자의 말씀과 같이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학생의 흥미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업역량을 강화 하는데 매우 적절한 교육기제라고 생각한다. 교과 통합적 진로교육과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교육생태계의 확장 등 인천 진로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진로교육은 동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한 학습동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기본역량을 강화하는것이 진로 적응성과 진로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이 늘어난다면 인천에 기반한 인천형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맹목적 진로교육으로 인해 진로교육담당자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왔고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입장에서 첫째, 진로교육은 진로탄력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가 30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근속연수가 평균 6년으로 대략 6번의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의 가속에 따라 미래에는 그 주기가 더 빨라진다고 볼 때 이제 평생직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연하게 진로문제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 즉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인천형 진로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표1] 근로자평균근속연수, 평균연령 및 학력별 임금격차

(단위:년, 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근속연수	6.2	6.1	6.2	6.4	6.0	6.2	6.4	6.3	6.5	6.7
평균연령	39	39.6	39.9	40.5	40.4	41.1	41.5	41.6	42	42.6

출처: e-나라지표(5인 이상 사업장 통계자료)

둘째, 인천에 기반한 진로교육과 인천의 특성에 맞춘 진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인재에 관한 정립과 인천형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천 기반 진로 교육은 인천에 살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미래 진로교육 방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전환기 진로 프로그램 또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진로-진학의 연계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이며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다. 진로 교육 중 해 묶은 논쟁 중 하나가 진학을 진로교육에 포함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인천의 진로교육 방향은 진로와 진학을 연계하는 것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맞춤형, 고교학점제, 입학사정관제와 2015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두 진로 교육에 기반하여 진학하는 제도이다.

[표2] 진로정보 내용별 필요성 인식정도

(단위:명, 점)				
진로정보 내용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이해 정보	3.95	0.98	3.97	0.95
진로체험 정보	4.01	0.93	4.07	0.89
직업정보	4.16	0.90	4.18	0.87
학과정보	4.17	0.90	4.20	0.88
진학·입시정보	4.23	0.90	4.25	0.88
진로설계 정보	4.07	0.92	4.14	0.89
학습 방법 정보	4.08	0.93	4.11	0.92
취업 정보	4.17	0.91	4.17	0.89
N	8,917		8,365	

출처: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20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국가 진로 교육 현황에 따른 학교 진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진로개발역량을 진학에 활용하여 진로교육과 진학 교육이 연계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인천의 진로 진학지도 역량은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진로 진학에 관한 예산과 담당자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편이다. 나아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에보이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진로교육과 관련된 예산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진로교육의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역할

학교 진로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제가 시행되었고 2015년 진로 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량제고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교과 통합적 진로교육과 진로와 연계한 진학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 사실 천여 명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교원의 확충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⁹⁾ 배치에 대해서는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표4] 학교급별 진로체험처 수 현황

(단위:개교, 개)

진로체험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3	2.04	5.34	6.37	3.35	6.45
민간기업			3.66	4.43	3.45	7.50
개인사업장			4.24	5.74	2.71	6.64
청소년 및 시민단체			1.00	1.64	0.80	1.60
학교 및 대학교			2.75	3.58	3.64	5.53
기타			0.74	2.72	0.37	1.31
계			17.73	16.09	14.33	19.89
N	400		400		400	

출처: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20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생태계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5년 진로교육법 통과 이후 일부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에 진로교육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로교육의 성패는 우리 사회 모두의 역할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지자체의 마을교육활동에 적극

9) 학교 내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수요를 한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진로 전담교사를 학교별1명 이상 배치하거나 진로교육법 9조2항에 따라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 개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마을교육 사례공유보다는 진로교육법¹⁰⁾에 따른 법안에 관한 설명회 또는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 지원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진로교육은 학교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인식과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각도의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4. 진로교육의 확장

[표5] 학생의 희망직업을 알게 된 경로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님	2,356	36.0	2,480	38.7	2,182	32.8
학교 선생님	706	10.8	1,170	18.3	1,458	21.9
학원 선생님	332	5.1	491	7.7	555	8.3
형제·자매	395	6.0	375	5.8	338	5.1
친척	338	5.2	400	6.2	388	5.8
친구	1,001	15.3	805	12.5	829	12.5
이웃 또는 아는 사람	288	4.4	444	6.9	469	7.0
대중매체·TV	2,102	32.1	2,348	36.6	2,417	36.3
웹사이트·SNS	1,778	27.2	2,245	35.0	2,235	33.6
서적(책)	808	12.4	790	12.3	862	13.0
진로체험	773	11.8	632	9.9	902	13.6
기타	265	4.1	406	6.3	505	7.6
N	6,542		6,411		6,653	

출처: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20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년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희망직업 1위로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사로 나타났다. 물론 10년 전보다 상위 10위까지의 누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희망직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를 비롯하여 운동선수, 경찰관,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진로 교육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표5]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알게 된 경로로 부모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아 학부모 진로 교육 아카데미 등의 학부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예산 편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 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진로 문제 또한 진로교육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진로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국 최고의 진로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교사와 소통하기를 바란다.

10) 진로교육법 제4조 4항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대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법안이 들어 있다.

■ 질문

Q1.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생태계를 확장하고 확장된 생태계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김승보 선임연구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보 연구원님께서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과 민간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김승보 위원)

Q2.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가진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뿐만 아니라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 인력확충도 필요합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진로교육관련 전공학과 학사이상 취득한자 또는 진로교육 관련 국가자격, 민간자격증을 보유한자, 진로교육 소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등인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에는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덕한 장학관)

청소년의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위해 ‘나들’이 할 일

● 마재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소통교육분과)

I. 들어가며

‘**삶의 힘**’ :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¹¹⁾ ≡ ‘**역량**’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

‘**진로**’ : 앞으로의 삶의 방향.¹²⁾

‘**나들**’ : 삶의 주체인 ‘나’가 여럿이 만나 소통·협력하면 ‘나들’이 됩니다.¹³⁾

청소년은 ‘이생망’이라며 자살률 1위¹⁴⁾인데, 교장의 직업 만족도는 1위¹⁵⁾입니다. OECD 34개국 중 산재사고 발생률 1위¹⁶⁾는 모른 척하고, 그 중 경제성장률 1위¹⁷⁾라며 시장경제체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환호합니다. 평균 지능지수는 세계 2위(106)¹⁸⁾인데, ‘마침’ 부모 이혼율도 2위¹⁹⁾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혼·재혼가정의 청소년들이 ‘세상 망한 것 같은’ 모습으로 컴퓨터에 오고, 사고가 빈번한 직장에 취업합니다.

한국의 각자도생하는 ‘나’들은 좋은 머리를 ‘돈/승진/출세/개인/편리/개발/성장/소비’에 쓰고, 타인 생명, 사람 중심 공동체, 환경 보존, 일자리 나누기에는 눈을 감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교육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독일의 입시/대학서열화/등록금/특권학교 폐지는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박종학 위원의 토론자료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6.7년이면 약 30여년의 노동생활 중 6번 정도 직장이나 직업이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①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② 저임금 일자리도 선택하겠지요.

청소년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하려면, 국가가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회가 책임진다’(마살의 사회권)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복지가 청소년에게 삶의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하고, 4차 산업혁

11)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2) ‘daum 한국어’ 참조.

13)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의 말.

1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outh&logNo=221823861432> 참조.

15) <https://neweducation2.tistory.com/23> 참조.

1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bsstory&logNo=221285774296> 참조.

17) <https://www.mbn.co.kr/news/economy/4245182> 참조.

1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ddlsms123&logNo=221995719551> 참조.

19) http://barkiller.kr/t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334008&stf=&stx=&stt=wr_hit&scd=desc&scp=and&page=10343 참조.

명에 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현장 중심 직업체험’과 재원 마련을 통한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주장합니다.

II. 청소년의 삶의 힘을 죽이는 인천 교육

인천 시민께 묻습니다. ‘인천 교육’은 ‘청소년의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교사·청소년이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부모·시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교사는 교육이 ‘청소년의 삶의 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모에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게임 캐릭터 그리기’에 흥미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수학만큼은 절대 듣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을 사그라들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열강하는 선생님께 ‘자는 모습’은 예의가 아니니, 대신 캐릭터와 아이템을 생각하라 했지요. 예○고의 미술중점반에 보내려 했으나, 일반고(주 12시간) 못지않게 ‘수영국’을 9시간이나 하길래 인근 인문계고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직업학교(= ‘전문계고’)의 수가 적습니다. 대졸자의 기대소득이 고졸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트럭 운전사가 대학 교수보다 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아시지요?²⁰⁾ 어려운 노동일수록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핀란드는 기초학교(1~9학년) 졸업생의 46%가 인문계고에 가고 54%가 직업학교에 갑니다²¹⁾, 한국은 70%가 인문계고로 갔다 대학에 진학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며, 특성화고에 18%, 특수목적고에 4.6%가 진학합니다.²²⁾

1. 고등학교는 청소년에게 ‘좌절’을 가르치고, 마음에 ‘열등감’을 심습니다.

청소년에게 ‘1~9등급을 매겨’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는 교육은 ‘한국 고교 교육과정’의 ‘특색’입니다. 미래 일자리는 계속 변하고 있고 직업도 소멸한다는데, 학교의 ‘암기 위주 수업방식’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교사 선발방식도 바뀌야 합니다. ‘암기왕들’이 교대·사대에 입학하거나 교직이수에서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생 연금이 보장되는’ 교사로 합격한 경험과 확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영국’은 취침시간인 것 아시죠? 저녁에는 학원 가고 밤에는 게임하니 ‘죽을 것’ 같이 피곤해, ‘살고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매일 ‘수포자’, ‘영포자’임을 각인시키며 ‘내 수업이 재미없나?’ 자책합니다. 낮은 등급의 청소년은 ‘전문계고 갈 걸’, ‘예체능 할 걸’하고 후회합니다. 유럽처럼 직업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화려한 화면과 재미를 제공하는 게임에 빠집니다. 1등급(4% 이내, 25명중 1명)도 글자 읽고 정답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2~9등급도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되니 절망합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도 안됩니다. 학교가 평가로 ‘죽인’ 자신감을 가상공간에서 적을 죽이는 능력으로 ‘되살립니다’. 수업에서 재능을 찾을 시간도

20) http://book.interpark.com/blog/postArticleView_rdo?blogName=forjess&listType=B&listSize=3&postNo=5180875&prdlpTp=20 참조.

21) <https://blog.naver.com/europestudy/221018579505> 참조.

22) <https://blog.naver.com/jmpjifa/221408907201> 참조.

없으니, 진로 선택도 뒤로 미룹니다.²³⁾

2. 입시 위주 교육과 부모 민원이 교사들의 ‘학교 밖’ 진로교육을 막습니다.

김승보 *위원*의 발제 내용처럼 ‘한국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 ‘열공 프레임’, ‘지식 전달’, ‘정답 맞추기’, ‘진도 빼기’로 청소년의 2030년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올리기에 열중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 민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성적 떨어지면 앞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부모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진로와 생계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죠.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이 모여 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세우십시오. 학교든, 학원이든 ‘SKY 몇 명 보냈다’고 공표도 금지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청소년기를 ‘대학 입시와 임용고시 준비’로 힘들게 보내야만 했던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거라 수차례 예고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이제 ‘나들’은 ‘분배’를 말할 때입니다. 제자들의 진로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범위 확대’와 ‘수업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외쳐주십시오. 그래야 일반교과에서 직업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고, ‘학교 밖으로’ 나와 ‘직업체험’도 소신껏 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 학교교육법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을 보면, 학교와 ‘청소년 진로지도센터’가 공동으로 8~10학년 청소년들에게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직업입문교육을 ‘직업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청에 따라’ 7학년 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직업 훈련 및 고용이 해당 학생에게 이롭다고 판단될 때, 직업훈련 및 고용 참여를 통해 의무교육 요건 충족을 인정합니다.

<표 II-1> 덴마크 학교교육법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범교과통합 필수주제	[7조] 1) 기초학교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가지 필수 주제가 교육되어야 함 (1) 교통안전 (2) 보건, 성 및 가족교육 (3) 교육, 직업 및 노동시장 입문
전환 시기의 기초 직업입문교육	[9조] 4) 모든 단위학교는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와 공동으로 8~10학년 시기에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단기간의 기초 직업입문교육을 제공해야 함 5) 모든 단위학교는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와 협력하여 8~10학년 시기에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을 학교 밖에서 제공해야 함
직업 훈련의 의무교육 대체	[33조] 4) 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장은 7년 교육을 마친 학생의 직업 훈련 및 고용이 해당 학생에게 이롭다고 판단될 때, 직업 훈련 및 고용 참여를 통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교육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있음

자료: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13), Bekendtgørelse af lov om folkeskolen, Ministry of Education Consolidation Act No. 521 of 27.05.2013 Valid, [On line]. Available: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5631#Kap2> 재구성

23) [진로상담] 윌리엄슨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 4가지 : 불확실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진로 미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sesophia22&logNo=221500654362> 참조.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않으면, 2030년에 청년 일자리는 없습니다.

‘미래 일자리’를 검색하면, ‘교사, 의사, 기자, 판사, 은행원, 주유원, 매장 직원, 음식점, 자영업, 제조업 등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아이들 머리속에 수학공식과 영어문법, 지운이의 생각까지 주입하고 정답만 골라 ‘인서울’ 대학에 가라고 하실거면, 과목별로 ‘전국 1타 교사’ 한 분씩만 계셔도 됩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이미 ‘왓슨(Watson)²⁴⁾’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고, 기자 대신 인공지능이 주식 뉴스를 만들고 종목도 사고 팝니다. 모든 판례를 저장한 AI가 ‘인간 판사’보다 더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이며, 은행은 수년 전부터 점포수를 계속 줄이고 있고, 셀프 주유소는 관리자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아마존 고(Amazon Go)에는 계산대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결혼 대신 동거를 할 것입니다.

‘나들’이 청소년 진로교육에 아무런 관심과 실천이 없으면 2030년의 취업은 요원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학교는 청소년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하게 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진로탄력성도 기를 수 있게 시간과 기회들을 무수히 제공해야 합니다. 전두엽(이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변연계(감정)가 활성화되어 자기 생각과 마음도 잘 모르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교실에 앉아서 ‘진로에서도 정답을 찾아보라!’고 하면 찾지 못합니다. 시민들께 여쭙습니다. 진로에 정답이 있으시던가요? ‘이 일, 저 일 해보다 “쫄 할만하네!” 싶으면 하는 일’이 직업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답입니까? 우리는 암기왕이 아니었고, 하루 4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20시간을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1등을 하라고 강요하면 안되지요.

4.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은 개발 단계부터 마을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덕한 장학관이 발제한 내용의 바탕자료인 「교육청 초·중·고 연계 인천형 진로교육 정책 개발 연구」를 보면, ‘초·중·고·대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방안’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세상 이해’를 한 후 ‘진로인식’과 ‘진로탐색(1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중학교는 ‘진로탐색(2차) → 진로설계 → 진로선택’까지 가야죠. 그래야 인문계고에 가서 대학에 입학할지, 전문계고에 가서 취업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진로선택’하면 늦습니다. 고등학생때는 인문계든, 전문계든 직접 직업현장에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요.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인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14곳)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9곳)」이 빠졌습니다. 십 수년 전부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수련시설과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꿈드림은 네트워크에 꼭 들어가야 하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야 합니다. 진로교육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소통·협력하세요.

24)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073> 참조. IBM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컴퓨터이며,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다.

2018년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유형 1위는 ‘대인관계(26.3%)’, 2위는 ‘진로·학업 문제(16.6%)’였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탐색과 직업선택도 미루게 하며, 향후 면접 도전, 취업후 동료관계, 고객 응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11월, 통계청 발표에서도 ‘청소년 고민 1위’는 ‘직업(30.2%)’이며, 2위는 ‘공부(29.6%)’였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은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체험처 발굴’에 좀더 노력하겠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는 체험처가 부족해 ‘체육 진로’에 관심있는 청소년에게 “예체능이니 전시회에 가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진로체험’ 제대로 하려면 학교와 마을간 ‘진로체험 거버넌스’부터 구축하세요. 교장이 바뀌어도 계속 만나 소통해야 하며, 직업 체험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방과후나 주말, 방학이 아닌 평일 수업시간에 진행하려면 법 정비도 서두르시구요. 마을내 교육생태계는 구성원들간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존중해야 협력이 지속됩니다. 마을 활동가와 기업, 가게들의 직업체험 관련 예산 지원/교육/연수/워크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은 직업 체험을 위한 인력과 장소만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 지쳐서 동력을 잃고 떨어져나갈 것입니다.

덴마크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하고, 9학년에 4주간의 직업체험(경찰서, 군대, 유치원 교사 등)을 하며, 청소년과 진로상담교사가 함께 상의하여 학습계획서도 작성합니다. 이는 장학관님의 자료 중 ‘성장발달 이력관리’와도 유사한데요. 교육청의 이력관리는 ‘컴퓨터로 체험활동을 누적 관리하듯, 단편적으로 진로교육 이수사항도 저장을 하겠다’ 정도로만 보여 안타깝습니다. 덴마크의 학습계획서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청소년을 주체로서의 ‘나’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청소년 혼자 또는 부모가 도와서, 또는 강남의 사교육업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사/부모/지역진로센터/지역사회 시민/청소년 전문가 등이 협력해 작성합니다. 그래서, 1~9학년 청소년들은 진로 역량을 기르고, 일반고에 갈지 직업학교에 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9학년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면 ‘애프터스쿨(기숙형)’에서 1년간 지내며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상담교사와 함께 배워야 할 과목 목록을 작성합니다. 물론 일반고에 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직업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정책은 ‘미래에 일을 하게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청과 학교는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연구 자료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위한 철학이나 키워드도 없고,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업집단 대표자들(경영자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남동공단, 주안공단 등) 및 시장 상인 연합회장들과 그 흔한 ‘직장 체험 업무협약(MOU)’을 맺은 내용조차 없습니다.

○튜브를 검색해 봐도 ‘인천 진로교육’이 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청 사업 홍보영상들만 잔뜩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선언만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대신에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할 수 없도록 ‘평일 10시’에 진행한 ‘2019 인천마을

교육 공동체포럼’ 소식은 찾았습니다.²⁵⁾ 양복 입은 남성분들과 양장 입은 여성분들이 많던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동원(?)되신 분들로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전남 순천·충북 청주·경기도 용인 등의 마을교육공동체, 괴산증평 진로체험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경기도 동탄 중앙이음터, 서울의 성미산 학교, 의정부 몽실학교(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자치배움터), 유럽 등 타지역의 사례들이 부러웠습니다.

<청주 두꺼비마을 교육공동체의 진로영역 일부 발췌>

- ①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영역 : ‘심리를 통한 자아 찾기’, ‘마을 시네마극장’, ‘나와 마을공동체, 마을에서 세계로 역사탐방’
- ②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 : ‘마을 속 진로 찾기’
- ③ 진로 탐색 영역 : 두꺼비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 특색’ 특별면 소감 쓰기

Ⅲ. ‘나들’의 과제

1. 현장 직업체험 시간 확보를 위해 ‘수영국’ 수업시수부터 줄입시다.

청소년이 직업을 ‘직접’ 체험하려면 최소 4시간에서 1일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요청해 교육과정부터 개편하세요. 인천만 줄이면 부모들이 걱정하니, 전국이 공평하게 줄여야 합니다. 수학은 주 2시간, 영어와 국어는 1시간씩 줄여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와 ‘생생한 직장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넉넉한 시간을 들여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 개설 요청권’도 주십시오. 그래야 진로 역량을 스스로 키웁니다. 덴마크의 ‘움돔스쿨’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움돔스쿨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가 만든 일종의 학원입니다. 국비로 운영되며, 어떤 이유로든 학업에 뒤처지거나 학교에 대한 좋지않은 기억이 있는 청소년,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들도 무료 교육을 받습니다. 음악, 연극, 댄스, 목공, 디자인 등 코펜하겐에 있는 움돔스쿨은 강좌 수가 무려 600개에 달합니다.

교육청은 청소년이 일을 하면, 기업과 가게에 아르바이트 급여의 50%를 보조하여 최저시급이라도 받게 하세요. 주당 4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서, 사고 싶은 것을 사며 ‘나도 언젠가 취업을 하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도전정신과 자신감은 덤이며,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자립심도 생깁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켄거루족도 방지하고,²⁶⁾ 부모들은 용돈을 적게 줘도 됩니다.(사회자본의 증가)

25) 유럽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위해 ‘교육 출근’을 인정합니다.

26) https://www.ytn.co.kr/_ln/0103_201510190901544836 참조. 70대 부모가 40대 백수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2. 학교별로 ‘직업 체험부’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다섯 자리씩 만드세요.

청소년은 일에 도전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진로탄력성도 생깁니다. 기존 교사에게 ‘직업 체험처 확보’나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미팅 업무’를 추가하지 말고, 학교별로 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직업 체험부’를 만드세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공공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실 한 학급의 청소년 수도 1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교사도 지금의 1.5배를 더 채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물론 재원은 ‘자신의 달걀이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람’(고자산가, 고소득자)에게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진보 정당도 아닌 영국 자유당(보수 성향 정당)에서 1895~1904년에 기수 역할을 했었고, 재무장관과 총리를 지냈던 로이드 조지의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토요일을 이용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핵심 수행인력’ 5명이 필요합니다. 주로 마을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식당 사장님, 슈퍼마켓을 찾아가 직업을 체험하게 했고, 현○제철소 직원, 프로그램 강사가 소개한 직업인, 평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부모 등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사람 책)를 들려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원에 진로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수련관의 청소년 진로동아리 활동들을 소개했고, 인근 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항공운항서비스과, 간호학과, 뷰티케어과 재학생들이 와서 연극 연출자나 뮤지컬 배우, 항공 승무원, 간호사 등의 직업을 소개한 후 체험하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시간대별로 고품도 지급하니 인기가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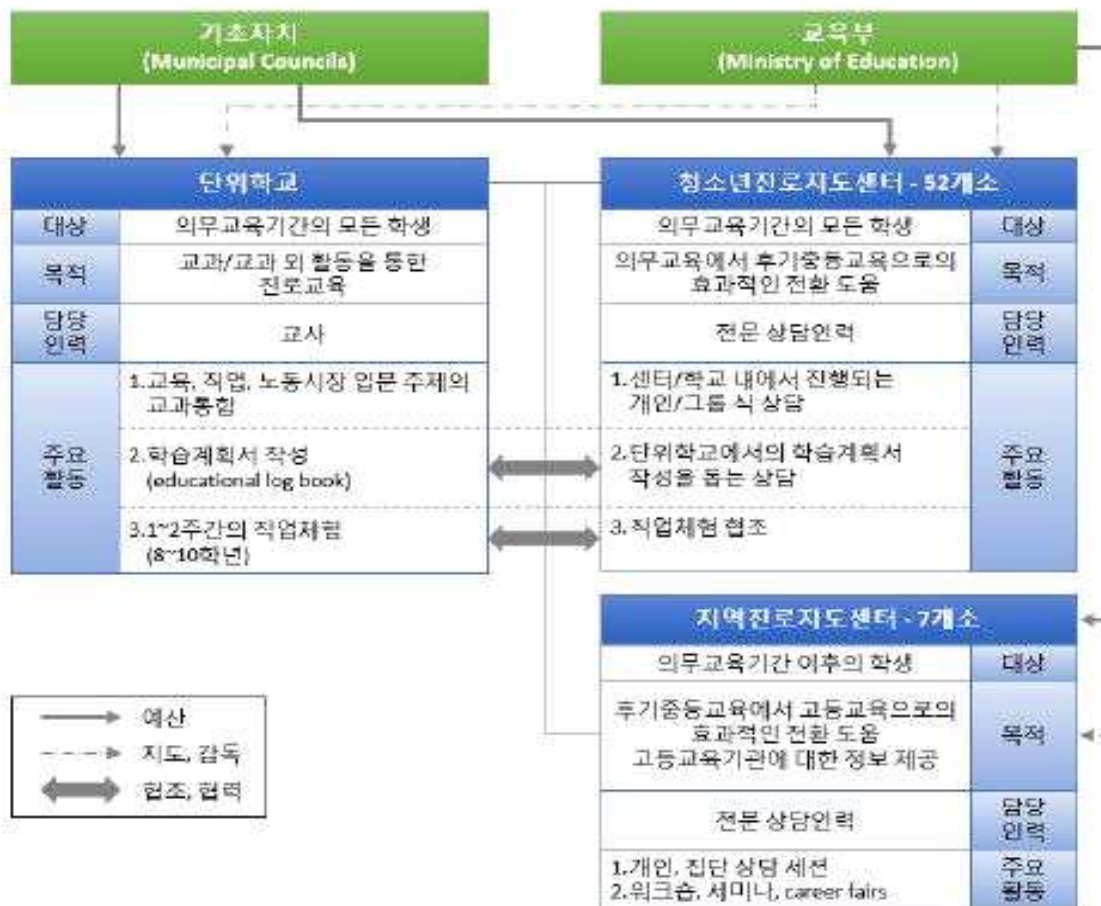
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을에서 진로체험을 진행하니, 수련관 평생프로그램에 마감강좌가 속출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사무실에서 ‘간식을 나누며’ 편안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마을로 나와서 진행하는 생생한 ‘학교 진로교육’은 부모·시민들이 인천의 진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꼭 ‘학교 밖으로’ 나오세요.

진로교육 정상화를 위해 핀란드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제의 통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9년 동안 재능을 관찰하면서 ‘교육, 직업 및 노동시장 입문’ 등의 교과를 통해 개인별 진로를 돕습니다. 한국은 공모 형식으로 일부 학교만 진행하거나,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한 시간에만 진로교육을 합니다. 핀란드는 1970년대에 ‘학교 개혁’을 단행하여 1~9학년의 통합학교를 만들었고, 교육과정도 하나의 단일한 교육과정 내에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교대의 정원을 늘리고, 사범대의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10.32:1입니다. 대학들이 ‘학위 장사’로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希望 拷問]’만 안겨주고 있지요.

3. 교실에서 할 ‘진로수업’이 있다면,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과서/이미지/영상으로만 ‘간접’ 직업체험 시키지 마세요. 2030년에 줄어 들거나 소멸할 직업들입니다. 교실에서 진행할 진로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진로 상상’을 담을 ‘진로 그릇 만들기’(집단상담) 정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 친구에게 공감하고,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며, 시험성적과 ‘엄친아’가 무너뜨린 자존감/자신감/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직업체험을 다녀온 청소년이 있다면, 그 직업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요.

‘덴마크의 진로교육 운영 체계’를 보면, 학교와 청소년진로지도센터 간 협력이 잘되고 있고, ‘지역 진로지도 센터’는 진로전문 상담인력들이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세션’을 진행하고, 워크숍, 세미나, Career fairs(진로 박람회)도 진행합니다.



자료: Euroguidance Denmark(2012). Guidance in Education. 재구성

[그림 11-2] 덴마크의 진로교육 운영 체계

2030년에 기업들은 연구직 등 매우 제한된 인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나마 기업은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한 번 해보자!’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 팀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고객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은 ‘수영국’ 위주의 암기 위주 교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창의, 도전, 협업, 공감을 끌어내는 교육을 하십시오.

2030년에 청년들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창의, 도전, 협업, 공감 등의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않으면,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애○, 구○, 삼○ 등과 경쟁해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사회보장정책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부족한 한국은 주로 개인자본에 의존해 창업을 하는데요. 부모 재산이 ‘매우’ 많지 않으면, 자칫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4.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위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출산’을 삭제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자본을 확충’하면 출생률이 0.87(세계 최저)보다 상승할 것입니다. 국가는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참고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한국이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이 153조원입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개인자본)이 22년간 총 3억 896만원이 듭니다.²⁷⁾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를 위해 직업체험, 수련활동, 정서상담, 복지혜택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청소년 정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지자체가 주치의를 배정하며 출산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²⁸⁾ 가족이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함께 머무른다면, 그들이 먹는 음식도 국가가 제공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드는 교육, 의료, 복지비용도 대부분 사회자본으로 해결합니다. 노르웨이는 1969년 앞바다에서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했을 때 - 이○○ 대통령처럼 - 민간기업에 매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국영 오일펀드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자산 1,000조원의 국부 펀드(GPFG)’를 만들어 운용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46조원을 인출했습니다.²⁹⁾ 최근 2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6% 내외입니다.³⁰⁾ 인천국제공항까지 민영화하려 했던 한국의 이○박 대통령과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미국은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가?’로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이 없는 ‘무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일자리 감소 문제가 국민 삶에 고통을 주어,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확대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국민이 실업상태에 놓여도 국민의 기본적인

27) <https://karaste.tistory.com/16> 참조.

28)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박노자 외, 2013) 참조.

29) <https://www.etoday.co.kr/news/view/1894149> 참조.

30) https://blog.naver.com/mywealth_1/221524715792 참조.

생계는 책임지는 북유럽 모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키아의 올릴라 회장은 “실패한 미국식 자본주의 대신 북유럽 경제 모델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돼야 한다”, “북유럽식 자본주의는 강한 정부와 글로벌 개방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³¹⁾ 얼마 전 한국의 ‘인국공’ 사태를 보십시오.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을끼리 싸웁니다.’ 목소리를 높일 대상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언론의 행태도 한심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을들의 주장’만 담은 기사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나들’이 할 일은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청소년들이 사회가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AI, 로봇 등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 뻔한데, 학교가 진로교육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속이는 교육이 아닌가요? 사회가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확신을 청소년·부모에게 심어줘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상태에 놓여도 든든한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자본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믿음도 주어야 합니다.

5. ‘양질의 일자리’가 2030에 청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교사·부모님께 묻겠습니다! 2030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취직을 하나요? 지금도 ‘저임금 일자리’가 남동공단, 주안산단, 식당과 비닐하우스에 있기는 한데, 외국인 차지입니다. 조금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 다니는 40~50대’와 ‘고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교육과 복지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들은 관심을 많이 받아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사람 이슈’에 집중합니다. 시민들이 ‘빛나간 자식 사랑(최○실, 김○태 등), 사위 찬스(윤○열 등), 한국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김○태, 김○수, 전○훈, 주○순 등) 등 주로 사람 발언 이슈’를 조회하니깐요. 언론이 이렇다면, 교사/교육청/교육부라도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독일은 초등학생도 ‘난민 보호’를 위해 집회를 하고, 스웨덴의 툰베리(17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를 오가며 캠페인을 이끅니다.

2030년을 위해 어떤 일자리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 등 사회복지 서비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기후변화/중국 미세먼지/일회용품 금지/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사회운동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9032310295175198&outlink=1&ref=%3A%2F%2F> 참조.

기업 육성, 음악/영화/게임/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청소년·교사·부모·시민 등 ‘나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면 다른 일자리도 얼마든지 상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지도자’로 이번 포럼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밖’, ‘가정밖’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나는 일자리가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사명’ 중의 하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인해서인지 ‘나들’ 중에도 증세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자본이 부족해 개인자본으로 버티는 한국에서는 지출이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보유하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을 좀더 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축하받을 일입니다. 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부자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산과 소득의 기준’은 얼마였을까요? 평균 자산은 67억원, 연소득은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금융자산으로만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명이었습니다.³²⁾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은 여가문화 소비로 바깥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니면 꼭 증세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개인자본으로 내는 세금보다 사회자본으로 받는 혜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과태료나 벌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제자들의 ‘2030년 취업’을 위해 교육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제자들의 재산과 소득은 ‘0’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입의 재갈도 사라졌습니다.³³⁾ 선생님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입니다. 말을 통해 ‘제자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말했습니다.

IV. 나가며

‘인천 미래교육 1차 포럼’때 오셨던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은 한국의 교사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라 말했습니다. 정치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교사들에게 ‘폭넓은 정치적 자유권’을 주어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며,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보장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독일도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할 수 있어, 교사들은 법조인(20.7%, 628명 중 130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16.1%, 101명)이 제15대 연방의회에 진출했습니다.³⁴⁾ 어려서부터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풍부한 정당활동을 통해 30~40대가 되면 총리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한국 국회는 대부분 할아버지들입니다. 한국도 교육감, 시장, 의원 등 선거에 만16

3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nomic00&logNo=221664637288> 참조.

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1651004?input=1179m> 참조.

34) <https://brunch.co.kr/@jek1015/92> 참조.

세 이상 청소년들은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에 묻힌 그 중의 한 사람이 아닌, 주체로서의 ‘나들’(청소년·교사·부모·시민)이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 질문 1 (이덕한 장학관)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한 해에만 5만 2,539명이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학령기(만7~18세) 청소년 576만 644명 중 ‘6.75%인 38만 9,177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³⁵⁾ 이는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료, 진로진학교사 어느 한 분도 ‘학교밖’ 청소년에게 ‘내가 진로교육을 하겠다’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청소년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은 하지 않으시나요?

■ 질문 2 (김승보 위원)

3년 전 수도권 3곳은 ‘진보 성향’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인천시민도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아닌 ‘진보 성향’ 교육감을 뽑았습니다. 대개 보수는 보존을 하려는 입장이고, 진보는 변화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과 학교의 진로교육 현장은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미래를 지향해야 할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해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선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2030 인천형 진로교육’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화의 속도와 보조라도 맞춰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간의 기업이였다면 연봉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관료제의 폐해’나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안일주의’는 아닌지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획기적인 진로교육 정책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35)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참조.